

정부 권력기관 개혁 탄력받나...국회 입법 관건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한 정부 합의안을 21일 내놓으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2기의 개혁 드라이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김대중 정부 출범 때부터 검찰개혁의 주요 화두로 거론됐으나,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권력기관 개혁' 부문 첫머리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동시에 내세우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취임 1년 만에 주무부처 장관들의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안을 발

지지율·선거압승 동력 '수사권 조정' 난제 해결 공수처·국정원 개혁·감사원 독립 등 속도 기대

표하는데 성공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 갔다는 점 역시 이런 '속도전'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정국을 거치며 분출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현 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재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 2기에서 이어질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도 힘이 붙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정부는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나란히 권력기관 개혁 첫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낼 태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법무부 정책방향 중 검찰과 관련한 우선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며 "하반기 국회에선 공수

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안 역시 문재인 정부 2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법위에서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를 빼는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개헌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 무산되기는 했으나, 정부에서는 일반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최대한 개혁의 취지를 살려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각종 권력기관에 '성역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에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등 대부분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당의 의석수 과반을 점하지 못한 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런 개혁

법안들에 대해 대부분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으로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낼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2기에서는 민생·경제 문제에서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동안 일자리 창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까지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정부의 개혁작업에 강력한 바탕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조금씩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혁신 기자회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6·13지방선거의 결과와 관련해 당 혁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권 조정 "환영" vs "알력다툼 우려"

민주 "입법 마무리"...한국 "이권 챙기기 안돼"

여야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초점을 달리한 논평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를 환영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각오를 다진 반면, 야당은 검·경의 힘겨루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주고 한 점이 가장 큰 변화"로 "합의안 도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및 수사의 질 향상도 관건"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조속히 법사위와 사개특위를 가동해 필요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최근 드루킹 게이트를 보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양 기관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고 꼬

집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간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으로 수사권 조정문제를 봉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경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관련내용은 조정안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합의안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 정착과정에서 검·경 이기주의로 인한 알력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망치고 있었다"며 "수사권 조정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임기 내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자치분권위, 사무·권한·인력·조직 결정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이 그간 강조해온 논리였다. 경찰은 수사 외에도 치안·교통·정보 등 다양한 기능과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경찰의 사법적 통제가 어렵다면 주민에 의한 통제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는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 경찰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취지를 지닌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제주에는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 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관광객 안내, 환경·위생·산림 등 17종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수사권이 제한돼 있고 자치경

찰의 사무가 국가경찰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정부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 제주자치경찰의 사무수준보다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제주 등지에서 시범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추진 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응용 계획을 조속히 세우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은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분야의 사무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서 다뤄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 경찰조직인 국가경찰 기능 중 어디까지를 자치경찰에 넘겨줄 지에 대한 명확한 범위 등이 합의문에는 담겨 있지 않은 탓이다.

합의문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에도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역시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경찰로 이관할 국가경찰의 수사기능을 놓고 관련부처가 종류와 범위 등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남북연락사무소 8월 개성공단에 설치

내주부터 개성공단 상주 본격 개·보수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약사무소 건물에 8월 중 설치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1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 강연에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장소와 관련, "중립지원센터 바로 앞에 남북교류협력협약사무소가 있다"면서 "개·보수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남북간에 (의견) 일치해 왔다"고 말했다.

당초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이름이 바뀐 교류협력협약사무소는 2005년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가 2010년 5·24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폐쇄됐다.

4층 짜리 건물로 폐쇄이전까지 2층에 남북, 4층에 북측 당국자가 10여명씩 상주하며 주로 경험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건물은 지난 8일 현장점검 결과, 지하층 침수와 벽면누수, 유리파손 등이 발견돼 지난 19일부터 물빠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개·보수 작업을 진행해 8월 중순 이전에 교류협력협약사무소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를 이르면 시일 내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개소시점은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며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은 당초 개·보수 공사로 우리측 당국자가 개성공단에 상주하기 시작하면 이에 맞춰 임시 공동연락사무소를 여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이는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에 남북장성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다.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언제라도 남북 당국자간에 신속한 대면협회가 가능해져 남북 교류·협력의 '첨봉'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운영되는 남북간 협의체인 판문점 직통전화와 팩스, 군 통신선, 국가정보원-통일선선부 채널, 정사간 핫라인 등이 모두 통신채널이라는 점에서 상시 대면협회는 남북간 소통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천해성 차관은 "남북이 같이 상주하며 같은 공간에서 여러 현안을 심층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남북관계가 또 한 번 발전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북, 적십자회담...이산상봉 일정 확정

전면적 생사확인·서신왕래 등 논의할 듯

확인과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들의 고통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한 번에 100명씩 만나는 지금의 상봉방식으로는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산가족 등록자는 총 13만2,124명이며 이 중 7만5,234명이 사망했고, 5만6,890명만 생존해 있다.

생존자 중 70세 이상이 전체의 85.6%인 4만8,703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일부가 2016년 진행한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산가족 중 74.7%는 북한 내 가족

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미 북측과 전면적 생사확인 합의할 때를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 및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할 자리를 묻는 수요 조사를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제안에 응할 지는 불투명하다.

남측은 과거에도 적십자회담 등의 계기에 북측에 이를 요구했지만,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밖에 북한에 억류된 김정숙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석방문제도 적십자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고위급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진전된 소식이 들리지는 않고 있지만 '인도적 사안'을 논의하는 적십자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의제다.

반대로 북측도 지난 2016년 중국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 12명의 송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북한은 종업원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국내 한 방송에서 '기획 탈북' 의혹까지 제기돼 북한이 그날 넘어가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우리 억류자 송환 문제와 탈북종업원 복송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지만, 우리 정부는 "분리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남북이 22일 8·15 이산가족상봉행사 등 인도적 사안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개최한다.

남측 대표단은 21일 오후 출발해 강원도 고성에서 하루를 묵은 뒤 22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회담장인 금강산으로 향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남북장성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를 계기로 갖기로 한 이산가족상봉행사의 구체적인 일정과 상봉 규모 등을 정하는 일이다.

이산가족상봉행사가 8·15를 계기로 열린다면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당국자는 "이산가족상봉행사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사항이니 남북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남측은 이에 더해 이산가족 문제의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면적 생사